

제16호(2016. 8. 5.)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농농업 활로 찾기

김 태 곤



1. 쌀정책 개혁	1
2. 쌀 생산조정제도의 경과와 공과	3
3. 생산조정 폐지에 따른 향후 전망	10
4. 농농업의 새로운 활로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용렬 연구위원	061-820-2363	kimyl@krei.re.kr
내용 문의	김태곤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061-820-2241	taegon555@naver.com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쌀은 국민의 주식이다. 정부는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장기간 개입해 왔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단수 증가나 풍흉 등의 요인에 의해 쌀 가격의 하락과 변동, 이에 의한 쌀농업 경영불안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상이다.
-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한 것이 생산조정제도이다. 일본에서 생산조정제도는 1971년부터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쌀 생산면적 축소(減産)에서 시작하여, 다른 작물로의 전환(轉作),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전략작물 증산(育成)으로 개선되고 있다.
-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는 단순히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쌀 수급 균형을 비롯하여, 쌀농업의 경영안정과 전업농 육성, 농농업 구조개선, 지역농업 진흥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어 왔다.
- 일본의 쌀 소비량은 연간 8만 3,000톤 씩 감소한다. 쌀 식부면적을 연간 1만 6,000ha나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쌀 생산조정제도는 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규제완화의 정책 전개 속에서 생산조정제도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 배경에는 과중한 재정부담, 생산자의 한계감,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 등 다양한 논쟁이 있다. 쌀 생산조정제도에 대하여, 경과와 방법, 공과(功過) 등을 살펴보고, 폐지 이후의 행방, 농농업 활로개척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 생산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략작물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을 진흥하였다는 적극적인 평가에서부터 쌀농업 규모확대를 저해하였다는 비판, 당시 쌀에 대해서는 전량 국가관리체제에서 수급균형에 의하여 재정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주장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 쌀농업은 그동안 농농업 발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다. 장기간 실시해 온 생산조정제도의 폐지는 농농업에서 작물선택의 자유도를 높이고 지역별로 전략작물을 육성하여 농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구동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할 점이다.

논농업 발전 위해 쌀 생산비 40% 절감, 쌀 직불제 폐지

1. 쌀정책 개혁

1.1. 쌀 생산비 절감

- 일본은 쌀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하여 2013년 ‘일본재흥전략’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플랜’을 통하여 정책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 먼저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의 단지화, 영세농가 조직화 등을 통하여 쌀 생산비를 대폭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10년간 자재·유통 등 산업계의 노력도 함께 반영하여 쌀 생산비를 전국평균 대비 4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 또한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전업농의 규모화·단지화, 유휴지 발생 억제 등을 도모한다. 향후 10년간 전업농의 농지 점유율이 전체 농지의 80%를 차지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1.2. 쌀 직불제 개혁

□ 쌀 고정직불제

- 쌀 직불제는 2009년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경영안정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쌀 직불제는 ① 쌀 고정직불제와 ② 쌀 변동직불제, 그리고 판매수입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③ 수입보전 직불제 등이 있다.
- 쌀 고정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2010년산 쌀 고정직불 단가를 산정할 때 목표가격은 ‘표준생산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생산비 산정 시에 자가 노임은 80%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목표가격은 생산비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 지불단가는 목표가격(표준생산비)과 표준판매가격과의 차액이며, 10a당 15,000엔이다. 즉 쌀 고정직불금에 의한 보전수준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이다.

1) 기준연도(2011) 쌀 생산비(현미 60kg)는 16,000엔이다. 이를 2020년 9,600엔으로 절감하여, 쌀 관세철폐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쌀 직불제 폐지는 수요가 감소하는 주식용 쌀의 감산과 수요가 증가하는 신규수요용 쌀, 전략작물 증산의 메시지

- 이와 같은 쌀 고정직불금을 2014년부터 10a당 7,500엔으로 반감, 2017년까지 계속하고²⁾, 2018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쌀 고정직불제는 생산조정과 연계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쌀 생산조정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

□ 쌀 변동직불제

- 쌀 고정직불제는 쌀 가격이 생산비를 항상적으로 하회하는 수준을 보전하는 일종의 부족불제도이다. 변동직불제는 당년도 판매가격이 표준판매가격을 하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여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변동직불 단가는 표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 농가판매가격이 표준판매가격을 하회하면 그 차액이다. 2010년산 변동직불 단가는 10a당 15,100엔으로 산정되었다.
- 변동직불금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2010년산은 지급되었으나 2011년산과 2012년산은 산지가격 상승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2013년산은 쌀가격이 하락하여 다시 지급되는 등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³⁾
- 변동직불제는 2014년산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수요가 감소하는 주식용 쌀의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주식용 쌀로의 집중을 방지하되, 사료용·가루용 등 신규수요용 쌀이나 전략작물로의 생산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2) 쌀 고정직불제 예산은 2013년 1,613억 엔에서 2014년 806억 엔으로 감축하였다.

3) 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가격은 다음과 같다(2010년산). 현미 60kg당 농가판매가격 10,263엔, 고정직불금 1,725엔, 변동직불금 1,715엔 등 농가수취가격은 13,703엔이다. 이것은 표준생산비(13,703엔)와 동등한 수준이다. 쌀 직불금은 생산비를 보전한다는 의미의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한다.

2. 쌀 생산조정제도의 경과와 공과

2.1. 쌀 생산조정제도의 경과

- 쌀 생산조정제도는 1969년부터 2년간 시험사업 후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시 당시에는 일시적인 과잉으로 판단, 일정기간 실시 후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생산조정면적은 1971년 55만 ha(20%)에서 2003년 102만 ha(38%)로 확대되었다. 2004년부터는 면적관리방식⁴⁾에서 수량관리방식⁵⁾으로 전환, 쌀 생산수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1>.
- 또한 의무적인 생산조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07년부터는 국가 주도에서 생산자 자율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0년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실시와 함께 생산조정 참가여부에 대한 선택제, 쌀 고정직불제를 통한 생산비 보상, 쌀을 대체하는 전략작물 육성 등의 조치가 강구되었다<표 1>.

2.2. 수량관리방식의 실시방법

□ 생산수량목표의 배분⁶⁾

- 생산수량목표는 주식용 쌀의 소비실적, 재고, 전망 등을 근거로 국가가 결정한다. 전국추진협의회⁷⁾가 전국의 쌀 생산수량목표를 결정하여 현별 생산수량목표를 배분한다.
- 현별 추진협의회⁸⁾는 시정촌별 생산수량목표를 배분한다. 또한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종별 생산면적을 제시하거나 고품질 쌀 재배를 유도한다.

4) 면적관리방식은 논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는 면적(減産)을 국가가 결정, 이것을 현별, 시정촌별, 지구별, 농가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목표면적을 달성해도 쌀 식부면적이나 단수가 늘어나 과잉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5) 수량관리방식은 쌀 수요량에 근거하여 쌀 생산목표를 결정, 이것을 현별, 시정촌별, 지구별, 농가별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시정촌 단계에서는 '쌀 생산수량'과 지역 단수로 환산한 '쌀 식부면적' 등 두 가지 지표를 전달한다.

6) 2016년 주식용 생산수량목표는 743만 톤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생산수량목표(751만 톤) 대비 8만톤 감소한 수량이다.

7)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량부회'가 담당한다.

8) 현 전중·전농, 집하단체, 행정기관(현청, 현 관계기관), 현 농업회의, 소비자단체, 실수요자단체, 유통단체, 후계자, 전업농, 학식경험자 등이 참가한다.

수요가 늘어나는 전략작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주식용 쌀 감산을 유인

- 시정촌 지역추진협의회⁹⁾는 농협 등이 생산조정방침을 작성, 여기에 참가하는 생산자에게 생산수량목표와 식부면적목표를 배분한다.¹⁰⁾
 - 참가농가는 식부목표면적 이내의 식부를 행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한다.
 - 실시확인 주체(지역협의회)는 식부상황을 면적으로 확인한다.
 - 단지 식부목표면적을 초과하여 식부하거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생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 전략작물의 육성

- 쌀 생산조정은 쌀의 생산수량목표를 관리하는 한편, 논활용 직불제를 통하여 논에서 쌀을 대체하는 전략작물을 육성하는 동시에 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전략작물은 비주식용 쌀(사료용 쌀, 청벼, 가루용 쌀, 가공용 쌀)을 비롯하여, 맥류(밀, 보리), 대두, 사료작물, 지역특산작물 등이다.
-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증산을 포함하여, 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모작 지원’, 지역단위의 쌀 사료화와 논방목 등을 추진하는 ‘경종축산 연대’, 그리고 ‘저비용화’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여 지역특산작물을 개발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2>.

2.3. 전략작물의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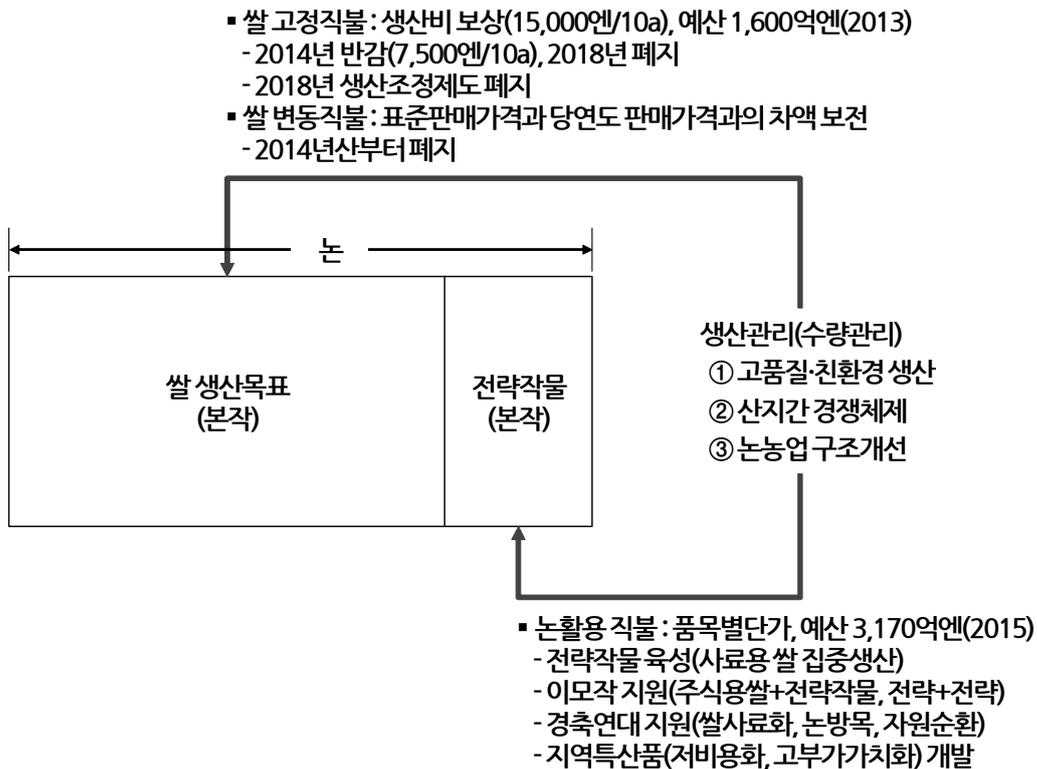
- 전략작물은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논에서 생산 가능한 작물이다. 전략작물의 육성은 쌀을 대체하고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전략작물은 ‘논활용 직불제’로서 유인한다.

9) 생산조정방침작성자(농협, 집하업자, 농가), 행정기관(시정촌, 현 출장소), 농업위원회, 소비자단체, 유통단체, 학식경험자 등이 참가한다.

10) 실제 쌀 생산수량목표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에서 생산자간 조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자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지구 간 또는 현내의 시정촌 간에 조정을 거친다. 시정촌 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적지적작(適地適作)의 관점에서 ‘현간 조정’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니이가타현과 사가현의 현간 조정을 보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니이가타현은 쌀 목표수량을 늘리는 반면에, 사가현은 쌀 목표수량을 줄이는 대신에 맥류·대두 등 전략작물을 증산하는 조정을 행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과 전략작물 육성으로 논이용이 다양화 이것이 농가의 소득원과 지역농업 진흥 효과

그림 2. 현행 생산조정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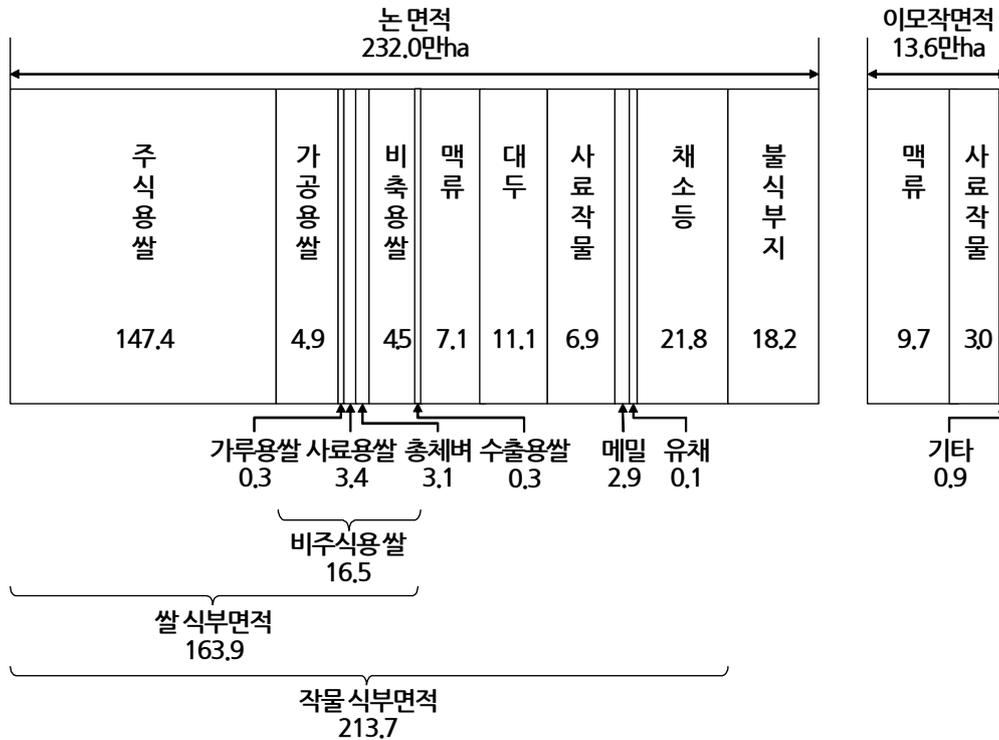


자료: 필자 작성

- 논에서 쌀 생산조정과 전략작물 육성의 결과로 논 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쌀을 비롯하여, 맥류, 대두, 사료작물, 채소 등이 재배되고, 또한 쌀에 대해서도 주식용과 신규수요용 등 용도를 구분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면서 지역농업이 진흥되는 효과가 있다.
- 2014년 현재 작물별 식부면적을 보면, 전체 232만 ha의 논 중에서 주식용 쌀이 147.4만 ha(63.5%), 비주식용 쌀을 포함한 전략작물이 66.3만 ha(28.6%)이다. 전략작물의 내역을 보면, 신규수요용(비주식용) 쌀 16.5만 ha, 맥류 7.1만 ha, 대두 11.1만 ha, 사료작물 6.9ha 등이다<그림 3>.

쌀 소비량은 연간 8만 3,000톤 감소, 이것이 생산조정 압박

그림 3. 논에서의 전락작물 식부현황, 2014년



주: 식부면적은 실제 파종면적 기준이며, 두령면적은 제외됨.
 자료: 農林水産省(2015, 11).

2.4. 생산조정제도의 공과

□ 과잉문제의 발생

- 생산조정을 실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간 3차례의 쌀 과잉문제가 발생하였다. 과잉의 요인은 1인당 쌀 소비량 및 총인구 감소에 의한 총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조정면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나 풍작 등에 의한 것이다.
- 최근 20여 년간 총소비량은 연간 8만 3,000톤 정도 감소하고 있다.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쌀 식부면적을 1만 6,000ha씩 줄여나가야 한다. 그동안 일시적인 과잉은 있었지만 이전에 비해 수급균형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생산조정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임승차가 참가자에 허탈감을 주고 제도를 와해하기도

□ 생산조정에 대한 한계감

- 생산조정면적이 계속 확대하여 2003년 100만 ha(논면적의 38%)를 초과하자 지자체를 비롯하여 생산자와 농협 등 관련 당사자 간에는 한계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2004년부터 '쌀을 생산하지 않는 면적의 할당'에서 '쌀 생산수량의 할당'으로 개선되었다. 2007년부터는 '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쌀 수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조정 주체는 생산자와 농협으로 이행하여, 생산조정을 폐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 생산조정에 참가하지 않는 농가의 무임승차론

- 무임승차론은 생산조정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05년 당시의 생산조정 비참가자는 쌀 생산자의 30%(52.2만 호), 논면적으로는 22.6%(45.2만 ha)에 달한다(農林水産省, 2009, 7).
- 쌀 생산조정으로 가격안정이 유지되면 나타나는 비참가자의 무임승차는 참가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동시에 제도를 와해시키기도 한다.¹¹⁾ 그래서 2010년 호별소득보상제도에 의하여 생산조정 참가여부에 대한 선택제가 도입되었다.
 - 참가자는 쌀 식부면적을 축소하는 대신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고정직불금을 수급하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변동직불금까지 수급한다. 또한 전락작물을 식부한 경우 논활용 직불금을 별도로 수급할 수 있다.
 - 비참가자는 쌀을 자유롭게 식부할 수 있다. 단지 가격이 하락해도 생산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전락작물은 식부할 수 있어 논활용 직불금은 수급할 수 있다.

□ 단수 증가에 의한 수급조정효과 상쇄

- 생산조정의 최대의 약점은 단수증가에 의한 과잉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는 생산조정면적에 추가하여 풋베기용 쌀의 확보나 집하원활화대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11) 집하원활화대책은 생산조정 목표를 달성해도 풍작 등에 의해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과잉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의 50~60% 수준인 가공용 가격(7,000엔/60kg)으로 매입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생산조정 비참가자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비판에서 2008년에는 집하원활화대책은 발동을 하되,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편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服部信司, 2010).

생산조정제도는 규모화·단지화 등 농업구조를 개선

- 한편 2004년부터 수량관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단수증가에 의한 과잉발생 문제는 해소 나가고 있다.

□ 대규모 농가의 성장 등 논농업 구조개혁 저해

- 쌀 생산조정이 농업구조개선을 저해하고, 특히 논농업의 구조개선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쌀농업의 실태를 보면 규모확대에 따른 생산비 감소경향은 대체로 10ha 전후에서 둔화한다. 일본의 쌀 생산비는 경지 분산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작업적기를 초과하면 단수 감소와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관계로 10ha 전후에서 절감효과가 소멸한다고 한다(生源寺真一, 2011).

□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진흥

-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쌀농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조정제에 의한 쌀과 전락작물의 소득이 쌀농업 소득을 상회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吉田俊幸, 2003).
- 농림수산성 시산에 의하면, 쌀 생산조정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쌀 판매수입과 생산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0a당 소득은 26만 엔,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쌀 소득에 쌀 고정직불금을 포함하면 41만 엔이다. 그리고 전락작물의 경우 밀은 밭작물 직불금과 논활용 직불금을 포함하면 46만 엔, 대두 52만 엔, 유채 53만 엔, 사료용 쌀 40만 엔, 가루용 쌀 43만 엔 등이다(農林水産省, 2010. 12).
- 또한 생산조정제도는 전락작물의 단지화와 규모화, 지역단위의 합리적인 윤작체계 확립 등 농업구조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업농이 육성되고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지역특산 작물 육성, 단수나 품질 향상, 신기술 도입 등 지역농업이 진흥되는 효과도 인정되고 있다(김태곤·이정환, 2016. 6).

전략작물을 유인하는 논활용 직불제의 역할이 중요

3. 생산조정 폐지에 따른 향후 전망

3.1. 정부 주도에서 농협 주도로 전환

- 생산조정 주역은 2007년부터 정부에서 생산자·농협으로 전환되고 있다. 쌀에 대한 정보는 국가가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생산조정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주체는 생산자·농협·지자체 등이 참가하는 ‘지역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 2013년 쌀정책 개혁을 통하여 2018년부터 생산조정과 연계한 쌀 고정직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쌀 생산조정은 형식적으로는 폐지하는 셈이 되지만 2007년 이후와 같은 농협 주도의 생산조정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3.2. 생산조정의 정착조건

- 연착륙하기 위하여 직불제 폐지 등 쌀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추는 대신, 전략작물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농협 주도 방식이 정착하여 쌀 과잉을 해소하면서 논농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한다.
- 첫째, 쌀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주식용’은 감산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비주식용’(사료용, 가루용, 가공용 등)은 생산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사료용 쌀을 비롯한 비주식용 쌀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주식용을 감산한다는 방향이다.
- 둘째, 전략작물 육성이다. 논에서 생산 가능한 작물로서 수요가 증가하는 작물을 전략작물로 지정, 이러한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확충하여 식부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쌀 식부면적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셋째, 선택제의 정착이다. 쌀 생산조정과 전략작물 식부를 결정하는 수단은 쌀 직불제와 논활용 직불제이다. 쌀이나 전략작물이나의 선택은 논활용 직불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상이 생산조정의 정착조건이 된다.

‘쌀농업’에서 ‘쌀+전략작물’ 등 논농업으로 접근해야

4. 논농업의 새로운 활로

4.1. 쌀농업에서 ‘논농업’으로 접근

- 농업문제는 수요포화라는 시대적인 현상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일본에서 쌀은 장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구조 면에서 겸업화와 고령화에 의해 가격에 상관없이 쌀 생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소비 면에서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20년간 연평균 8만 3,000톤씩 감소하고, 이에 따른 감산면적이 연간 1만 6,000ha에 달한다.
- 쌀의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논농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쌀농업’에 대한 단순한 정책적 개입보다는 ‘논농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로 논농업에서 ‘쌀+전략작물’로 특화해나가는 것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방안이 된다.

4.2. 사료용 쌀의 생산확대

- 특히 논농업에서 사료용 쌀 생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료용 쌀은 주식용 쌀농업의 생산기반과 농기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 주식용 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쌀 사료화는 벃짚과 알곡을 사료로 활용하는 총체벼, 즉 ‘사료용 벼’와 사료곡물을 대체하는 ‘사료용 쌀’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료용 쌀’은 쌀 재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로서 사료용 쌀을 생산·가공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생산·가공·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사료용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2015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3년 사료용 쌀 생산은 11만 톤(2.2만 ha)에서 2025년 110만 톤(14만ha)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료용 쌀이 주식용 쌀 과잉을 해소하고 논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農林水産省, 2015. 3).

지역단위의 쌀과 집약작물 조합, 6차산업화와 농공상 연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농농업 성장의 구동력 역할

4.3. 농농업의 성장산업화

- 일본농업의 생산현장에 마을영농이나 생산법인 등 조직경영체가 등장하고, 6차산업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기업의 농업진입도 활발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쌀은 ‘조방작물’이다. 노동력이나 자본이 시설농업에 비해 그다지 소요되지 않는 대신 면적당 소득도 낮다. 쌀만으로 소득이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쌀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반으로, 쌀과 채소 등 집약작물의 조합(복합경영), 6차산업화나 농공상 연대(다각경영)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농업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 향후 추가적인 FTA 등에 의한 관세 철폐가 수반되면 농업의 보호수준은 더욱 낮아진다. 관세 철폐의 영향을 완화하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불제를 비롯하여 보험제도나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policy-mix)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태곤·이정환. 2016. 6.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 온 반세기 드라마.” 『시선집중』. <www.gsnj.re.kr>.
- 生源寺真一. 2011. 『日本農業の眞実』. ちくま新書.
- 服部信司. 2010. 『米政策の轉換』. 農林統計協會.
- 吉田俊幸. 2003. 『米政策の轉換と農協·生産者』. 農文協.
- 農林水産省. 2016. 2.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 _____. 2015. 11. “米をめぐる關係資料.”
- _____. 2015. 3. “食料·農業·農村基本計畫.”
- _____. 2010. 12. “農業者戶別所得補償制度の骨子.”
- _____. 2009. 7. “米政策·水田農業政策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について.”

KREI 현안분석 제16호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논농업 활로 찾기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8. 5.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이크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